



美에 '뒤통수' 맞은 韓 기업들 현지시설 전문인력 투입 난항

美, 韩기업 이민단속 파장

對美투자 상장 HL-GA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명 구금
석방교섭 마무리·귀국 절차
美, 무차별 단속 지속될 듯

우리 정부가 미국에 구금된 국내기업 현지 배터리공장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교섭을 미 정부와 마무리하고 이들의 귀국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지에 대거 투자중인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내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무차별 단속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지난달 25일(미국 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양국 간에 관세와 대미 투자 방안을 놓고 후속 협상이 이어지던 중 이 같은 단속 작전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충격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450여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출장간 한국인 30여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스

7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현대차그룹이 합작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조지아주 서배나 HL-GA 배터리 공장의 건설은 이번 사태로 전면 중단됐다. 나아가 완공 시점은 물론 제품 생산을 위한 고용 창출 계획 등도 안개속으로 빠지게 됐다. 미 이민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공사현장을 덮쳐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 450여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자국내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는 건 현지인 고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

나 공장 건설이나 초기 가동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공장 건설을 위해 국내 기술 인력을 파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엔솔 관계자는 “합작 배터리 공장은 현재 건설 막바지 단계로 최종 설비 반입과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며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정 특성상 현장에는 배터리 관련 인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

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근로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정책에 맞춰 수조 원대 대미 투자를 단행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공장 건설 등을 진행하는데 안정적으로 완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데 현지에서는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며 “원활한 적정 비자 발급 등 양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짓고 현지 채용을 진행하라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재명 정부,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공급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 속도
부동산 범죄대응 조직 신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 주택 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 실외 소음기준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그렇지만 집값 등과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투자 수요 억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또 불법·이상거래 및 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만든

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관련기사 2면〉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5년(2026~2030년)에 걸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연 27만호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공급 물량 대비 1.7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급

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公正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주택용지 직접개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등 대규모 주거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및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체됐던 주택 사업의 추진력도 확보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실외 소음 기준 완화 ▲교용지 부담금 완화 ▲공공택지 인허가·보상 등 지역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택사업의 성장을 억제했던 규제를 완

화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과 정에서 주거 환경이 변화하는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주택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6·27 대책' 후속조치…가계부채 억제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억제 방안은 ▲규제지역 LTV 강화(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을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를 산업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연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업의 비즈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뜨거운 감자'인 로보택시 등에 관한 인사이트도 함께 전달합니다..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metro

코스피, 허니문 랠리 썼지만 '검은 금요일' 후 동력 상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앞둬
박스권 갇혀 새 동력 과제

인 6월 2일 2698.97이었던 코스피는 5일 3205.12로 18.61%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11일) 앞둔 코스피는 고공 행진을 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글로벌 경기 부진과 같은 각종 악재에도 증시 활성화와 주주환원 정책 등이 국내 증시의 '허니문 랠리'에 톡톡히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는 새 동력을 찾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인 수출과 소비자심리지수 등은 최근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신호가 실제 실물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았다. 세제개편에 대한 실망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거래일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거래일 〈6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9차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직전 1위는 김영삼 정부(12.98%)였다. 이어 노무현 정부(3.89%), 이명박 정부(7.88%), 박근혜 정부(-1.46%), 윤석열(-2.96%)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갈 길은 멀다. 지난 8월 1일 검은 금요일 이후 코스피는 이를 만회할 뚜렷한 상승 재료를 찾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물론 코스피의 선전이 현 정부의 경제 성적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증시는 외국인투자가 비중이 크고,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등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다.

메트로 한줄뉴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한국직원 구금 관련 없는지 답해야” /사진 뉴시스

▲이 대통령, 강의구 전 부속실장·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면직안 재가

▲李 “영화 ‘어쩔수가없다’ 베니스 진출… 의미있는 성과”

▲국힘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 사퇴로만 안 돼… 징계 논의해야”

▲박수현 “당정대, 오늘 정부조직법 최종 조율… 검찰청 역사 속으로”

▲원유철 “국회, 북핵대응 비상특위 즉각 설치해야”